

POLICY TREND

정책동향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확정

최근 국제유가가 고공 행진을 지속하면서 에너지수급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을 상반기 중에 집중적으로 집행하기로 했다.

지난 20일 산자부는 총 4천749억원 규모의 '2004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운용 지침'을 확정 발표했다.

그동안 산자부는 약 5조 524억원의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을 지원했다. 이로써 지원금액 1억원당 3천8백만원의 에너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약 3년 정도면 투자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은 에너지절약시설설치,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투자, 에너지절약 자발적협약(VA) 업체지원, 집단에너지사업 및 신·재생 에너지보급사업 등에 장기저리의 정책자금을 융자·지원하게 된다.

그리고 에너지절약 효과가 높은 자발적협약 체결기업 및 ESCO 등의 에너지절약시설설치사업과 풍력, 태양광, 매립지가스(LFG) 등 최근 들어 대규모 투자 사업이 급증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에 중점 지원키로 했다.

을 에너지합리화자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에너지절약 시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융자지원대상 설비확대 및 자금 지원 한도액을 상향조정하고 ESCO사업에 대한 제도를 개선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또 에너지절약 효과가 우수한 고속 터보플로워 등 5개 설비를 융자지원대상에 신규로 포함하고 자발적협약사업의 자금지원 한도액을 동일사업자당 200억원에서 250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성과보증계약을 체결한 에너지사용자까지 자금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자발적협약(VA) 투자사업에 지원하던 생산공정 및 운전제어용 소프트웨어를 ESCO 투자사업까지 확대키로 했다.

신·재생 에너지보급 촉진을 위해 실증연구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확대 및 신·재생 에너지 인증제품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참여자가 자기 부담으로 설치하는 실증대상 설비에 대해서도 자금용자를 지원한다.

신·재생 에너지설비 인증제품에 대해서는 지원자금의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해 자금 추천을 받고서도 자금을 지원 받지 못한 사업자는 2004년 자금으로 계속 지원토록 했다.

자금의 조기집행 및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융자추천 후 최초의 자금인출을 4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조정했다.

산업자원부는 2004년도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연간 약 775천TOE의 에너지절감효과가 발생해 관련업계가 약 1천800억원의 원가절감 및 1억1천4백만달러의 국제수지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은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에너지절약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국제수지 개선은 물론 에너지 절약에 따른 CO₂ 발생저감 등 환경개선에도 크게 기여해 왔다.

따라서 에너지관리공단은 현재 중동정세의 불안정 및 세계 경기회복 기대에 따른 에너지수요증가 등으로 고유가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에너지절약사업을 적극 활성화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앞으로 기후변화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에너지절약기기 개발에 자금 이용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조달물자 조기발주

올 사업 23조규모중 상반기에 70% / 행자부도 지역공사 80% 이상 집행

조달청 및 행정자치부, 주요 지방자치단체가 경기 활성화의 일환으로 올해 조달계획 및 투자사업 예산의 조기 집행 계획을 잇따라 발표, 업계 활성화에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달청은 올해 조달사업 규모를 23조원 내외로 책정하고 연간 조달계획의 40%를 1/4분기 중에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특히 상반기까지 연간 계획량의 70%를 발주한다는 게 조달청의 기본 계획이다.

최경수 조달청장은 최근 발표한 신년사에서 “어려운 경제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조달 행정 차원에서 내수 진작 및 고용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은 조기 집행 방침을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9일 지자체 공사 발주물량의 80%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역공사 조기발주 시행지침을 전국 각 시·도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시행지침에 따르면 행자부는 지난해 확정된 지자체별 예산 가운데 시설사업 관련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함으로써 상반기 중 공사발주물량의 80% 이상을 먼저 집행토록 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침체된 경기를 되살리고 고용 창출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투자사업 예산의 85% 이상을 상반기에 배정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지난 6일 밝힌 조기집행 계획에 따르면 전체 예산의 62% 이상을 상반기에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3월까지의 주요 투자사업비의 65% 이상을, 6월까지의 85% 이상을 배정키로 했다. 경기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 예산의 72.3%를 상반기에 집중 배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올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7조9690억여원 가운데 5조7582억여원이 7월 이전에 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도 자체 재원으로 집행되는 시설비의 경우 소요예산 4332억원 중 91.3%인 3954억원이 상반기에 배정돼 해당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대구시도 올해 주요 사업예산 1조8096억원 가운데 83.1%인 1조5037억원을 상반기에 집행,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시는 전체 예산의 58%인 1조501억원을 1/4분기에 배정할 방침이다.

중기청, 해외시장개척단 70억 지원

중소기업청은 올해 일본에서 열리는 전설공업전과 중국의 국제전력설계 및 기술박람회등 중소기업이 참가하는 해외전시회와 시장개척단에 약 100회에 걸쳐 70억원을 지원한다.

중기청은 올해 총72회의 해외전시회에 중소기업을 파견할 계획인데 업종별로는 전기·전자·기계·섬유 분야에 45회를 배정하여 수출 주력업종의 해외전시회를 집중 지원하고 바이오 및 환경분야에 3회, 고부가가치 업종인 보석·안경 등도 20회를 지원한다.

특히 대만, 싱가포르 등 경쟁국에 비해 한국관이 초라한 점을 감안, 국가이미지 훼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시회당 평균 지원금액을 지난해 6200만원에서 올해에는 7700만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

시장개척단은 총 29회를 파견할 계획인데 최대 수출시장인 아시아 지역에 9회를 지원하고, 동유럽·러시아·CIS·중동·아프리카에 11회 등을 배정해 미개척시장에 대한 공략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이라크 특수를 활용하고 우리나라 제품의 대외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 중동·중남미·동유럽 지역 등에 고위급 민관 합동 무역사절단을 파견할 예정이다.

중기청은 앞으로 KOTRA와 인터넷 바이어 알선 전문업체 등을 활용, 수출유망품목에 대한 시장정보 및 소비패턴 등 현지의 생생한 정보를 수집·제공함으로써 사전마케팅 전략을 충분히 수립할 수 있도록 주관 단체 및 참가업체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산자부, 2003년 외국인 직접투자실적 발표

지난해 외국인직접투자 64억6700만불, 올 전망 80억불로 회복세 기대

‘도착기준’ 투자는 19.8% 증가...정책·제도 확충으로 기대감

지난해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그 폭은 점차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자원부가 지난 6일 밝힌 ‘2003년 외국인 직접투자 실적(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투자는 전년 같은 기간 보다 28.9% 감소한 64억6700만달러(신고기준)를 기록, 2000년 이후 4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산업자원부 임채민 국제협력투자심의관은 “지난해 외국인 투자가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은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 이라크 전쟁 등으로 다국적 기업의 투자심리가 위축된 데다 노사갈등, 내수침체 등 대내적인 불안요인이 겹쳤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임국장은 “지난해 투자실적은 당초 산자부의 목표치 60억달러를 넘어섰으며, 감소폭이 두드러지게 둔화되고 있음을 감안, 올해는 외국인투자유치가 증가세로 반전될 것” 이라면서 올해 실적을 약 80억불 수준으로 전망했다.

산자부는 지난해 외국인투자 유치에 위해 조세 입지 현금보조 등 인센티브의 확대와 경제자유구역 및 ‘인베스트 코리아’ 출범 등 외국인투자 정책과 제도를 대폭 확충함으로써 투자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세계적인 경기침체 및 이라크 전쟁 등으로 전세계 외국인투자가 전반적으로 위축된 상황에서도 한국의 도착기준 해외직접투자는 증가세를 시현했다.

실제로 지난 2002년 4분기 외국인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60% 줄었으며, 2003년 1분기 △48%, 2분기 △41% 그리고 3분기에는 △20%, 4분기 △1%로 감소폭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도착기준 외국인 투자는 작년 1-3분기까지 23억7600만달러로 전년 동기예 비해 19.8% 증가했으며, 연말까지는 30%내외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지난해 2분기까지 감소세를 기록했던 외국인투자(도착기준)가 지난해 3분기에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101.9%가 늘어난 8만6400만달러를 기록함으로써 지난 2002년 4분기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에 따라 새해에는 새로워진 투자유치 제도와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투자유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미국 일본 EU 등 주요 투자유치 대상국의 경기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으며 올해에도 성장세는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같은 세계적인 경기 회복세를 최대한 활용, 범정부적 외국인투자유치 시스템을 가동기로 했다.

현재 진행 중인 주요 투자프로젝트가 조기에 성사되도록 소관 부처가 중점 관리하며, 분기별 국무회의 보고를 통해 각 부처 유치활동 및 경영 생활환경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품 소재, R&D센터, 물류 및 관광 등 전략적 유치 분야별로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강화된 인센티브, 경제자유구역 등을 셀링 포인트로 활용하고 정상외교 등 정부의 대외활동과 민간경제협력활동을 투자유치와 연계시키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외국인투자 특징을 살펴보면 지역별로는 EU로부터의 투자는 전년 동기와 비교 84.1% 증가한 30억6100만달러였으며, 미국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72.4%가 감소했고, 일본도 61.5% 줄었다.

산업별로는 전체 외국인투자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했으나 전기 가스 건설 등 SOC관련 투자 비중은 감소했다.

특히 제조업에서 부품 소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76%를 기록했는데 이는 자동차, 반도체, LCD 등 주력 산업의 호조로 2002년 12억1000만달러에서 지난해 12억8천600만달러로 증가, 투자비중이 13.3%에서 19.9%로 높아졌다.

이밖에 규모별로는 1억달러 이상 대형투자는 건수 및 금액이 감소하고, 1000만달러-1억달러 중규모 투자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1억달러 이하 중·소규모 투자 비중이 50%를 상회함으로써 외국인투자 기반이 내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산자부, 송전용 전기설비 시설 기준 제정·시행

송전용 전기설비 시설 기준 제정·시행

“산자부, 765kV송전 시대 개막따라”

765kV 송전시대가 개막됨에 따라 앞으로 전원단지로부터 대용량부하 밀집지역으로 전력을 수송할 경우 765kV설비를 설치하고 345kV이상 변전소는 해당변전소의 최종규모를 고려해 신설해야 한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송전용 전기설비시설 기준에 관한 고시를 제정·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송전용 전기설비시설 기준에 따르면 765kV설비는 대용량부하 밀집지역으로 전력을 수송하는 경우, 345kV설비는 지역 간 간선계통망을 구축하거나 도심지로 대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154kV설비는 345kV공급 지역 내에 계통을 구성하거나 배전계통에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에 각각 설치토록 했다. 345kV이상 송전선로를 신·증설할 때에는 변압기 등 설비의 과부하, 계통고장 전류, 계통전압, 안정도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야 하며 가공송전선로 신설의 경우 2회선 1개 루트 건설을 원칙으로 하고 지지물은 송전용 전기설비에 대한 장기적인 계통구성의 변화를 감안해 선정해야 한다.

또 345kV이상변전설비를 신·증설하는 경우 해당변전소의 규모와 경제성 등을 고려해 하위전압으로 전력공급이 어려운 경우 765kV변전소를 신설하고 대규모 공업단지 및 신도시 건설 등으로 부하급증이 예상되거나 기존 변전소의 증설로는 전력수요를 감당할 수 없을 때는 345kV변전소를 건



설도록 했다.

이와함께 송전용 설비를 설치할 때 장기적 관점에서 해당설비가 감당해야 할 최종규모, 전력계통의 신뢰성 확보와 경제성, 전력계통의 안정유지 및 송전제약에 따른 혼잡비용, 접속선로 건설비용, 환경친화적 요소 등을 고려토록 했으며 154kV 송변전설비는 장기적으로 이중 또는 환상망 계통구성이 필요하거나 발전소 또는 변전소가 신설돼 송전용 전기설비에 접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설치토록 했다.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개정

조달청은 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 지난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2억1000만원 이상 10억원 미만 입찰시에는 납품실적 평가를 없애 정부조달시장에 대한 입찰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또 입찰참가 업체간 가격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신인도 배점한도를 +12~-10에서 +6~-5로 조정하고 신인도 평가항목 중 정부조달협정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적용범위를 국내입찰로 한정했다. 이와 함께 제조업체 또는 '외감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기업에 불리하게 적용돼 논란이 일었던 재무상태평가에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를 도입했다.

이는 외감법을 적용 받는 기업은 외부감사를 통해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있으나 개인기업은 회계감사에 대한 통제가 없어 허위 재무제표 제출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특히 외감법 적용업체의 경우 개인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채평가 등 재무상태평가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아 해당 업계의 불만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한편 적격심사제도는 입찰집행 후 예정가격 이하 최저입찰자순으로 납품실적과 재무상태, 입찰가격 등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기준점수(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이다.